

지역의 미래 ‘선택의 날’... “꼭 투표하세요”

오늘 지방선거...오전 6시-오후 6시
광주 359곳·전남 785곳 투표소 운영

초대 통합특별시장·교육감 선출 주목
집전 기초단체장 격전지 결과 촉각

與 “내란 청산” vs 野 “정권 심판”
공약·정책 등 따져 ‘참일꾼’ 뽑아야



(아이클라아트)

초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을 비롯한 지역의 참 일꾼을 뽑는 6·3 지방선거의 날이 밝았다.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만4천388곳의 투표소에서 지방선거 본투표가 일제히 실시된다.

지역 내 투표소는 광주 359곳, 전남 785곳 등 총 1천144곳이다. 본투표는 사전투표와 달리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가능하다.

전남·광주에서는 통합특별시장 1명, 통합특별시장교육감 1명, 통합특별시의원 57명(무투표 당선자 34명 제외), 기초단체장 25명(무투표 당선자 2명 제외), 기초의원 276명(무투표 당선자 44명 제외) 등 총 380명(무투표 당선자 포함 시 440명)을 선출한다. 광주 광산을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치러진다. ▶관련기사 2·3·4·6면

올해 전남·광주 지방선거는 행정통합을 통해 7월1일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초대 수장과 통합특별시장교육감, 통합특별시의원을 선출한다는 점에서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또한 지난해 대선 이후 1년 만에 치러지는 만큼 정치적으로도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 지방선거 결과가 향후 정국의 방향을 좌우할 대형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지방정부의 권력 구도 재편을 넘어 출범 1년을 맞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동력과 22대 후반기 국회의 여야 관계 등이 복합적으로 연동돼 있다.

무엇보다 더불어민주당의 ‘내란 청산론’과 국민의힘의 ‘정권 심판론’ 사이에서 전국 유권자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향후 4년간

‘대한민국(號)’가 나아가갈 방향타가 결정된다.

민주당의 텃밭인 전남·광주는 후보 공천 과정에서 불거진 잡음과 무투표 당선 속출 등으로 인해 민주당에 대한 민심 이반이 심상치 않다.

실제 기초단체장 선거의 경우 각종 여론조사에서 조국혁신당과 무소속 후보들의 선전이 두드러진다. 격전지로 분류되는 10곳 안팎은 승패를 예측하기 힘든 접전이 벌어지고 있다.

이는 사전투표율에서도 확인된다. 지난달 29·30일 실시된 사전투표 투표율은 전남이 38.95%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광주는 27.83%로 3위를 기록했다. 전국 평균 사전투표율은 23.5%였다.

특히 격전지가 많은 전남에선 8개 군(郡)의 사전투표율이 50%를 넘을 정도로 뜨거운 선거 열기를 보여줬다. 이리다 보니 민주당 경선과 공식

선거 운동 과정에서는 각종 선거법 위반, 네티즌·비방 등 구태가 재연돼 유권자들의 피로도를 높이기도 했다.

결국 지역민의 선택이 중요하다. 지방선거를 통해 ‘좋은 일꾼’을 뽑아야 하기 때문이다. 투표 참여로 유권자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 주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지방선거에서 누구를 선출하느냐에 따라 지역의 미래와 운명은 바뀐다.

통합특별시장과 시장·군수·구청장은 인사권 뿐만 아니라, 예산 편성·집행권, 인허가권 등 막강한 권한을 갖는다.

그동안 잘못된 선택이 지역의 퇴보를 불러오는 사례는 비일비재했다. 정책이 중단되고 혈세가 낭비되는 경우도 수도룩 했다. 각종 비리로 중도 낙마하는 단체장 때문에 막대한 비

용을 들어 재선거를 치러야 하는 상황도 반복됐다.

단체장을 감시하고 견제할 통합특별시의원과 기초의원 등 지방의원의 역할이 막중하리다.

유권자의 한 표는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지역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된다. 혈연·지연·학연에 얽매이지 말고 후보의 공약, 정책, 능력을 따져봐야 한다. 선관위 공보물을 뜯어보지도 않고 버려선 안될 일이다. 공보물에 담긴 후보자 관련 정보를 꼼꼼히 살펴보고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

주민을 위해 봉사할 지역의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의 존재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다.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는 것은 유권자의 권리이자 의무이기 때문이다. /김재정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 “지역균형발전 속도감 있게 추진”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

서민·취약층 등 민생 전반 확산 의지

“물가안정책 신속...매점매석 철저 조사”

이재명 대통령은 2일 현 정부 출범 1주년을 앞두고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균형발전과 국토 대전환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양극화 완화를 위한 대안을 효과적으로 마련해 ‘모두의 성장’을 위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4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의 모두발언에서 “우리의 역량과 잠재력을 적극 활용해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담당하는 글로벌 외교·안보 강국의 위상을 한층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앞으로 4년간 국정 속도를 2배로 높이고 정성을 다하면 8년처럼 일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국민의 삶, 대한민국에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수출 등 핵심 지표 개선의 성과를 중소기업·소상공인, 서민·취약계층 등 민생 전반으로 확산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며 “인공지능 혁명과 에너지 전환을 가속할 물적·제도적 기반을 튼튼히 만들고 반도체만이 아니라 로봇·방위산업 등 여타 첨단산업의 육성에도 박차를

가해 글로벌 초격차 경제강국의 문도 활짝 열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난 1년의 국정에 대해 그는 “되돌아보면 내란에 따른 정치·사회적 충격과 민생 경제의 혼란, 국제질서 격변이라는 어려움 속에서 임기가 시작됐다”며 “국민의 성원과 공직자 여러분의 헌신에 힘입어 위기를 잘 넘어왔다. 그 결과 대한민국의 정상화와 회복, 나아가 도약의 발판도 튼튼하게 놓이는 중”이라고 자평했다.

이 대통령은 또 “중동 전쟁 장기화로 국민의 물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장비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 비축분의 선제 공급이나 할인 지원 강화, 할당관세 물량 추가 확대 등 필요한 대책을 각 부처에서 신속히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과 선제적 인관리를 통해 (물가의) 상승 폭이 상당 부분 낮아진 점은 다행이지만, 그럼에도 상당한 물가 부담이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누차 강조하지만, 매점매석이나 담합 같은 시장 교란 행위는 한 번만 걸려도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철저히 조사하고 엄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가 관리가 민생 안정의 핵심 전제라는 각오로 부처에서 총력을 다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김진수기자

Today
KIA 유니폼 입은 시라카와 “애틀랜틱 최고 될 것”
16면

중심을 잡습니다
핵심을 전합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연합뉴스는 국내외 최대 취재망을 통해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다양한 뉴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균형잡힌 언론의 시작은 언제나 연합뉴스입니다.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연합뉴스
YONHAP NEWS AGENCY

연합뉴스 | 연합뉴스TV | 연합인포맥스